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청구 진정서

수 신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진 정 인 조국혁신당

대표자 김선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여의도동, 극동VIP빌딩)

제4층 제403호

전화번호 02-335-0410, 팩스번호 02-335-0412

진 정 취 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자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1. [국민의힘]은 해산한다. 2.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그 직을 상실한다.라는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여 줄 것을 진정합니다.

진 정 이 유

1. 당사자 관계

진정인 정당은 1987년 체제가 노정한 한계를 극복하여 우리와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는 제7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새로운 정치 행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이 사건 진정대상인 [국민의힘](대표자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은 대한민국헌법 제8조가 명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이 명백하여 이 사건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권자와 요건

가. 헌법 제8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의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난 2013. 11. 5.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장관을 법률상 대표자로 하여 제4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증 제1호증 정당해산심판청구서).

다. 이상의 경과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였고(헌법재판소 2013헌다1 사건), 이 사건에서 현재는 정당해산의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헌법상 정당해산의 요건이 되는 “정당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 ‘정당의 목적’이란, 어떤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이나 지향점 혹은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획 등을 통칭한다. 이는 주로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이나 당헌의 내용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그밖에 정당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 발언, 정당의 기관지나 선전자료와 같은 간행물,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거나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당원들의 행위 등도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

약 정당의 진정한 목적이 숨겨진 상태라면 이 경우에는 강령 이외의 자료를 통해 진정한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이라고 판시하였고, “정당의 활동”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2)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3) 또한 헌법 제8조 제4항이 규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4)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의 요건으로서 비례성의 원칙 및 보충성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설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명문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정당해산결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당활동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한하여 정당해산결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은 헌재 결정례에 따를 경우 적어도 2024. 12. 3.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내란행위와, [국민의힘]의 정당 기관, 주요 정당 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국민의힘]에 귀속시킬 수 있는 다수의 행동들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정치적 과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이념을 부정하는 등 폭력적이거나 억압적 혹은 자의적인 지배를 통해 전체주의적인 통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부득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로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청구 및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점 후술합니다.

3. 헌법재판소 선례 검토 -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검토

가. 개관

위 2013헌다1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모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국민의힘] 정당의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목적의 위헌성의 경우 헌법재판소 판시에 의하면 정당의 주요인물들의 언동 등 활동에 의하여 목적의 위헌성 또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에서 활동의 위헌성이 중요한 쟁점이라 할 것이어서, 이하에서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의 위헌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통합진보당 ‘활동’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1) ‘내란 선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통합진보당은 구체적으로 2013. 5. 10.에 개최된 내란관련 모의회의, 2013. 5. 12. 개최된 내란 관련 모의사건에 대하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 당의 주요 정치인인 이석기가 주도적으로 내란음모혐의에 가담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석기 등은 위 내란모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위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하여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624(병합), 699(병합), 851(병합)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에서는 내란모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내란선동’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2심에 대하여 대법원(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 모두를 기각하여 2심 결과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석기 등은 내란 선동죄 등으로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습니다.

(2) 통합진보당 이석기 등의 내란모의에 대한 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통합진보당은 2013년 이석기 등이 내란모의 혐의를 받고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자, 2013. 8. 29.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를 개최한 이래 수개월에 걸쳐 당 조직을 ‘내란음모조작 국정원 해체 민주수호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16개 시도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해 왔으며, 인터넷 당 홈페이지 접속화면을 ‘통합진보당 투쟁본부 홈페이지’로 변경하였습니다. 홈페이지의 주된 내용도 위 사건이 조작되었고 이석기 등이 무죄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는 2014. 8. 11. 항소심 판결 이후 국가정보원과 정부를 비판하면서 “‘RO’의 존재와 내란음모가 모두 무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낡은 분단체제의 녹슨 칼 국가보안법이 그리고 법리에 맞지 않게 남게 된 ‘내란선동’이라는 죄목이 일곱 분의 구속자들을 가족과 동료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두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해산대상 정당의 내란에 대한 태도로서 중대한 해산사유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3) 내란 관련 사건의 통합진보당 귀속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례에 의하면, “통합진보당은 내란관련 회합의 강사로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이석기를 섭외하고, 피청구인 당대표, 국회의원,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들은 공개된 녹취록이나 형사재판 과정 등을 통하여 내란관련 회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을 계기로 피청구인 정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되는 등 정당의 존립이 거론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기소 이후 현재까지 위 사건이 국정원에 의하여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석기 등에 대한 무죄판결 및 석방을 요구하면서 당 조직을 ‘내란음모조작 국정원 해체 민주수호 투쟁본부’로 전환하는 등 이석기 등을 전당적으로 적극적으로 옹호·비호하고 있고, 회합 참석자들을 공직후보로 추

천하였다.……종합하면, 위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4) 그 밖의 통합진보당의 위법한 정당운영 사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통합진보당은 이상의 핵심적인 문제행동인 내란선동행위 외에도, (1)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2) 중앙위원회 폭력사건, (3)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을 범한 바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위에서 인정한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서울관악 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은 피청구인의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폭력적 수단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서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이고, 당내 민주적 의사형성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헌법에 위반되는 보조사실로 적시하였습니다.

(5) 통합진보당의 ‘활동’ 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례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활동 가운데 특히 내란 관련 사건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명백하게 드러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하여 주권을 미치지 못하게 하거나 헌법질서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폭동을 일으켜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내란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함이 명백하다.… 통합진보당이 단순히 일회적, 우발적으로 민주적 기본질

서에 저촉되는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에 기초하여 일으킨 것으로서, 향후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이 폭력에 의한 집권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통합진보당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관련 사건에서 보듯이 이석기를 정점으로 한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선언을 전쟁상태의 돌입으로 인식하면서 북한에 동조하여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도모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시킨 것이다. 또한 북한과 정치·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위험성은 단순히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만은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하여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위와 같은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지금껏 드러난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은 위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제기하는 상황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이고 투쟁적으로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시키거나 폐지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민주사회에서 보장되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의 과정 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에서만 그러할 뿐, 필요하면 폭력적인 수단일지라도 사용해서 의사를 관철할 수 있다는 투쟁노선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앞서 본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속에서 확인되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6)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례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에 대한 정당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첫째,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에 내포된 위헌적 성격의 중대성이다. 피청구인은 그동안 공당으로서 당내 북한 추종세력들의 활동을 묵인하고, 때로는 장려하기도 했으며, 외부로부터의 비판이 제기될 때에는 그들의 이념과 활동의 정당성을 옹호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진보적 민주주의로 포장된 북한추종적 이념을 무기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고 제거 혹은 폐지하려는 주장들이 현재 피청구인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쉽게 관철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신과 적대적인 정견을 가진 집단에 대하여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긍정하는 입장이 정치적 다수자의 지위를 차지한다면, 그들이 정치적 소수자의 의견을 통제하거나 묵살하고, 심지어 폭력으로 억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북한 등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리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이하 생략)

둘째,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이하 생략)

셋째, 피해의 최소성, 즉 다른 대안적 수단이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비록 피청구인에 대한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피청구인의 진성당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전체 당원의 수가 수만 명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이며, 특히 당내 주도세력이 수적으로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조직적으로 뭉쳐 응집력을 발휘하는 까닭에 피청구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정과정이나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치적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정치적 기반의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서 본 나치당의 전례에서도 확인된다.(이하 생략)

넷째, 해산결정을 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법익 형량)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피청구

인에 대한 정당해산결정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 전체주의나 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추종하지 않으면서도 진보적 사상과 이념을 지향하는 진보정당이 터잡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다원성과 상대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와 민주주의의 다원성·상대성 보장이라는 사회적 이익은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피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

이러한 단계적 검토를 거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4. [국민의힘]의 헌법 제8조 제4항 위반 여부 검토

가. [국민의힘]의 내력 및 현황

증 제2호증으로 국민의힘 홈페이지(<https://www.peoplepowerparty.kr/about/history>) ‘걸어온길’ 출력물을 제출합니다.

이 게시물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1997년에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한 한나라당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모태가 되는 신한국당은 그 연원이 1990년 노태우 대통령(민주정의당 총재 겸임) 및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 3인 합의에 의하여 출범한 민주자유당인바, 따라서 [국민의힘]의 시원이 1981년 전두환에 의하여 창당된 민주정의당이라는 점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1980. 5. 18.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

하고,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김대중 등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는 등 박정희 대통령 급서 이후 민주화를 염원하던 국민들의 여망을 짓밟았습니다. 나아가 이에 항의하는 광주시민을 군대를 동원하여 살육하였습니다. 그 후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이 집권을 위하여 만든 정당이 바로 민주정의당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시원인 민주정의당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 대통령 5인(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을 배출하였고, 현재 국회의원 108석, 광역자치단체장 12석(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및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입니다.

지지율의 경우 유력한 여론조사회사 기준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리얼미터의 경우 지난 2024. 12. 26.~ 27. 양일간 조사에서 30.6%(더불어민주당 : 45.8%)를 기록했고(증 제3호증 중앙일보 2024. 12. 30.자 기사출력물¹⁾), 갤럽의 경우 지난 2024. 12. 17.~ 18. 양일간 조사에서 24%(더불어민주당 : 48%)를 기록했습니다(증 제4호증 한겨레신문 2024. 12. 20.자 기사출력물²⁾). 2025년 신년맞이 각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양당간 벌어진 지지율 격차가 다시 좁혀지는 추세로 분석됩니다.

나. [국민의힘]의 ‘목적’ 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1) 앞서 본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 사건에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의 목적’의 의미에 관하여 “어떤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이나 지향점 혹은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획 등을 통칭한다. 이는 주로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이나 당헌의 내용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그밖에 정당대표나

1) URL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3789> 검색일 : 2024. 1. 5.

2) URL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4155.html 검색일 : 2024. 1. 5.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 발언, 정당의 기관지나 선전자료와 같은 간행물,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거나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당원들의 행위 등도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정당의 진정한 목적이 숨겨진 상태라면 이 경우에는 강령 이외의 자료를 통해 진정한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이라고 판시하였고, “정당의 활동”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시에 따라 [국민의힘]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먼저 [국민의힘]의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강령이나 당헌을 살펴보면, 특별히 위헌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강령 1.) 한다고 하고,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위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천명(당헌 전문)하는 등 [국민의힘]의 강령과 당헌의 내용 자체는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테두리 내의 내용으로 평가됩니다.

- (3)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목적의 위헌성에 관하여 ①정당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 발언, ②정당의 기관지나 선전자료와 같은 간행물, ③정당의 당원들의 행위 등을 정당의 목적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어 단순히 [국민의힘] 강령이나 당헌의 내용만을 들어 [국민의힘]의 목적이 합헌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일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일련의 내란행위에 관하여 [국민의힘]의 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 발언 등 행위들

은 후술하는 활동의 위헌성 대목에서 같이 살펴볼 것인바, 이를 통하여 [국민의 힘]의 목적이 합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 [국민의힘]의 내란 관련 ‘활동’ 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앞서 본 통합진보당 결정례의 기준에 따라, 2024. 12. 3.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범행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에 대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 여부를 포섭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 일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의 실행

이하의 내용은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작성한 증 제4호증 보도참고자료 김 용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 증 제5호증 보도 참고자료 박 안수, 광종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를 원용한 것입니다.

1) 위헌적인 계엄선포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은, 2024. 12. 3. 11:23경 계엄령을 선포함과 더불어,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포고령1호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상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 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발표한 담화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 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헌법과 계엄법 제2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부도, 법원도 그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상황에서만, 군대를 동원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오직 “병력을 동원하는 외에는 질서유지의 방법이 없다”는 절박한 수단상의 한계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이와 같은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취지를 밝힌 담화에서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파렴치한 중북 반국가 세력이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의회 내 의정활동이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활동일체를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정식으로 개최하지 않고, 형해화함으로써 계엄을 국무회의의 필요적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헌법 제89조 제5호를 위반하였고, 국회에 계엄선포를 전혀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

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배 하였습니다. 나아가 2024. 12. 4. 01:02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04:30경에야 비상계엄을 해제함으로써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2차 비상계엄을 모의하는 위헌적인 작태를 행한바 있습니다.

2) 위헌적인 포고령 1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직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주요 내용은 위 담화의 내용을 구체화 하여,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인 국회내 야당과 야당의 주요 인사에 대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포고령 1호의 작성자에 관하여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답하였으나, 이후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 밝힌바에 의하면, 김용현이 초안을 작성한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수정하였다는 것인바, 따라서 계엄포고령의 최종 작성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은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증 제6호증 한겨레, 2024. 12. 25.자 기사출력물³⁾).

3) 위헌적인 계엄과 포고령의 실행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운영을 저지한 후, 야당 및 주요 정부비판 인사들에 대하여 체포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실행행위를 지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오후 10:53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해”라고 말하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승인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민웅 촛불승리전환행동 상임대표 등이었습니다.

707특임단이 국회로 이동 중, 윤석열 대통령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이어 윤 대통령은 한 번 더 전화를 걸어 “국회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국회의 해산의결이 있는 경우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해산의결을 군대를 동원하여 막는 것이 첫 번째 계엄군의 임무였던 것이 드러

3) URL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4908.html 검색일 : 2024. 1. 5.

났습니다.

또한, 국회 내 다수당인 야당이 다수당이 된 것이 사실은 부정선거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외관상 확보하기 위하여, 과천에 소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에 침투하려고 기도하는 실행행위를 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체포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실행에 착수하기도 하였습니다.

4) 소결론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실행행위와 [국민의힘] 활동의 위헌성간 상호 관계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적법한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을 동원하여 우리 헌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체제의 핵심인, 독재를 부인하는 다수정당 체제와, 국민의 평등한 투표행위로서 구성되는 의회를 통한 국민주권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붕괴시키려는 내란을 실제로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범죄행위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출당시키기는커녕 이를 옹호하고 심지어 법원 발부 체포영장의 집행까지 저지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례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주요 인사들은 단순히 내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법원은 이를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내란 선동’으로 인정하였음에도 그 활동이 위헌정당해산사유의 주요 부분이 된다고 본바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보면, 이러한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실행행위에 [국민의힘]정당이 동조하고 일체화 되어 있다면 이는 매우 분명한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반응과 태도

1) 계엄령 해제 국회 결의 조직적 불참

[국민의힘]의 주도 세력은 2024. 12. 3. 밤 및 다음날 새벽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당사로 집결하도록 지침을 내림으로서 사실상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에 조직적으로 불참하였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4. 12. 04 오전 00:07 “즉시 와 달라” 호소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소속된 단체메시지 방에서 아무런 의결지침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회방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이 선언되고 국회에서 계엄해제가 의결될 때까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계엄해제에 대하여는 침묵함으로 사실상 계엄해제표결에 의원들이 집결하지 않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현재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방조죄로 고발되어 2024. 12. 29.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증 제7호증 한겨레, 2024. 12. 29.자 기사출력물⁴⁾).

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반대 당론 확정

[국민의힘]은 자당의 일부 의원들에 대하여도 비상계엄에 따른 체포대상자 명단에

4) URL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5264.html 검색일 : 2024. 1. 5.

있었던 명백한 내란행위가 있었음에도, 2024. 12. 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확정하였습니다(증 제8호증 머니투데이, 2024. 12. 6.자 기사출력물⁵⁾).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당론결정을 주도하였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의하면 ‘한동훈 당시 대표와도 상의된 사실이며, (한동훈도) 사실상 동의했다’ 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러한 탄핵반대 당론에 따라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의 위헌적 행태가 이어졌습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 등 몇몇 소속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탄핵소추에 찬성의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국민의힘]의 주도세력들은 이들을 맹비난하였습니다.

반면, 김민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2024. 12. 5.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굴고 있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친미 대 친북, 친중 간의 대결이 있고 탄핵소추문에는 바로 그들의 반란이 있는 것” 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담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발언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어제 많이 있었다”, “그동안 야당이 특검·탄핵 등 엄청나게 비열하게 대통령과 가족을 몰아붙인 점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며 적극적으로 계엄선포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증 제9호증 한겨레, 2024. 12. 5.자 기사출력물⁶⁾).

5) URL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0619192434435> 검색일 : 2024. 1. 5.

6) URL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1083.html 검색일 : 2024. 1. 5.

윤상현 의원은 2024. 12. 11.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하며, 내란죄로 수사를 받거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옹호발언을 하였습니다(증 제10호증 매일경제, 2024. 12. 12.자 기사출력물⁷⁾).

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배신자 색출 등 행태

[국민의힘] 주도세력들에 의하여 탄핵소추안 의결이 지연되다가 2024. 12. 14. 가가스로 의결에 이르렀는데,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의원은 108명의 의원 중 고작 12명에 불과하였습니다. 11명의 기권·무효표를 제외하면, 85명의 [국민의힘] 주도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실행하였음에도 이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앞에 천명한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자, [국민의힘]의 주도세력들은 ‘배신자 색출론’ 이 비등하였습니다. 당시 의원총회에선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이 “한 사람씩 일어나서 탄핵 찬반을 말하도록 하라” 고 제안하자, 법조인 출신 중진 의원이 여기에 동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찬성 의원들을 ‘레밍’ ‘민주당 세작’ 이라 맹비난하며 탈당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하여 “취새끼”, “세작” 이라고 의원총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가 하면,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에 대하여는 ‘인간성 장애인’ 이라는 폭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증 제11호증 한겨레, 2024. 12. 19.자 기

7) URL :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92757> 검색일 : 2024. 1. 5.

사출력물⁸⁾).

실제로, 탄핵표결에 찬성을 주장한 한동훈 당시 당대표는 이와 같은 [국민의힘] 주도세력의 배신자 색출압박에 의해 당대표직에서 사퇴하여야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도세력이 2024. 12. 14. 탄핵소추의결에 ‘반대’ 당론은 유지하되 표결에는 참석하기로 한 것도, 자당의 의원들에게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퇴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였을 뿐입니다.

4)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노골적 방해 책동

한편, 증 제4호증 보도 참고자료 - 김용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 기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01:03경 이후에도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하여 제2의 계엄선언이 있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내란수괴의 통치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하여는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거국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여줌이 마땅한데도,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2024. 12. 17.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은 법률상 불가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서, 내란사태의 조기종결과 국가안정화를 위한 길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였습니다(증 제12호증 서울신문, 2024. 12. 17.

8) URL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3639.html 검색일 : 2024. 1. 5.

자 기사출력물⁹⁾).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추가 임명을 위해서는, 재판관 임명불가의 [국민의힘] 당론을 따르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로 다음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의힘]이 만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4. 12. 26. “경제파괴, 외교파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초토화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 이라고 말하였습니다(증 제13호증 연합뉴스, 2024. 12. 26.자 기사출력물¹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024. 12. 27.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지칭하며) 이게 내란 아닌가. 내란 수괴가 도대체 누군가” 라고 발언하였습니다(증 제14호증 MBC, 2024. 12. 27.자 기사출력물¹¹⁾). [국민의힘]의 주요 핵심 당직자들이, 내란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행위가 ‘내란행위’ 라고 발언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실행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5) [국민의힘] 주요인사들의 내란 선전·선동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에 의하여 내란수괴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민전 전 최고위원은 2025. 1. 2.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하여 발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문에 윤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적대하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고 돼있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지를 않나, 한번도 농사짓지 않은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

9) URL :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4/12/17/20241217500015> 검색일 : 2024. 1. 5.

10) URL :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6133300001> 검색일 : 2024. 1. 5.

11) URL : https://imnews.imbc.com/news/politics/article/6671196_36431.html 검색일 : 2024. 1. 5.

다니지 않나.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왜 참지 못하셨을까 원망했는데, 제 원망이 잘못됨을 알았다”, “대통령은 정말 외로웠겠다 생각했다. 대통령이 그들을 막아왔구나 생각했다” 고 언동하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내란을 선전·선동한 것이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내란사태의 조기종식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증 제17호증 MBC, 2025. 1. 3.자 기사출력물¹²⁾).

또한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같은 2025. 1. 2.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시위에 참여하여 발언하면서, “이 판사는 법 위에선 판사이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위에 있는, 초법적 판사”, “좌파 사법 카르텔 온상” 이라면서 사법부를 비난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집회를 하는 것은 단지 윤석열 대통령 안위만을 지키려는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됐다.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발언하여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습니다(증 제17호증 MBC, 2025. 1. 3.자 기사출력물¹³⁾).

[국민의힘] 전신 정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역임한바 있는 나경원 의원 역시 2025. 1. 2. 페이스북에서 공개적으로 글을 게시하여, “탄핵국면에서 탄핵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 “이제는 수사절차 마저도 그렇다”, “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법원에

12) URL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3403_36799.html 검색일 : 2024. 1. 5.

13) URL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3403_36799.html 검색일 : 2024. 1. 5.

서 판단 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 로 하였습니다(증 제18호증 한국경제, 2025. 1. 2.자 기사출력물¹⁴⁾). 이로서 법관의 영장발부행위에 편파적이거나 위법성이 있다는 의혹을 유포하고, 내란사태의 조기종결을 위한 국민적 노력을 “법의 파괴”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6) [국민의힘] 주요인사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선동

2025. 1. 3.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에 착수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병력을 위법하게 동원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가 합동하는 공조수사본부의 영장집행에 저항하였고, 결과적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은 좌초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책동에 대하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 위원장은 2025. 1. 3.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국격을 떨어트리는 무리한 강제 수사를 중단하라”, “공수처의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대단히 잘못됐다” 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로서 법관이 검토하여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부인하고, 내란사태의 조기종식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였습니다(증 제15호증 시사저널, 2025. 1. 3.자 기사출력물¹⁵⁾).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거나,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편의적인 판사쇼팽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이 난항을

14) URL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0215357> 검색일 : 2024. 1. 5.

15) URL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358> 검색일 : 2024. 1. 5.

겪은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근거없는 법관발부 영장에 대한 거부때문임에도, 이는 전혀 지적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비난하여 내란사태의 조기종식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고, 윤석열 내란수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습니다(증 제16호증 조선일보, 2025. 1. 3.자 기사출력물¹⁶⁾).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박충권 의원 및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2025. 1. 3. 용산 대통령관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집행 현장에 참여하여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증 제19호증 경향신문, 2025. 1. 3.자 기사출력물¹⁷⁾). 즉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및 인사들은 사법부가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 방해를 선동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방해하기까지 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법치주의, 사법권의 독립 등을 노골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3) 내란옹호 활동의 [국민의힘] 귀속 여부

앞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례에서 밝힌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될수 있는 행위들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 (2)항의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진의원들의 발언이나 행동은 모두 2024. 12. 3.을 전후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행위로서 포섭되기에 넉넉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그 밖의 [국민의힘]의 위법한 정당운영 사례

16) URL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1/03/WBDLKWVHR7TFBEVBKD3NOPIE/>
검색일 : 2024. 1. 5.

17) URL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31146001> 검색일 : 2024. 1. 5.

1) 명태군 게이트와 [국민의힘]의 ‘활동’의 위헌성

관련하여 증 제20호증으로 뉴스타파 2024. 11. 18.자 기사출력물¹⁸⁾을 제출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명태군 관련 의혹을 크게 네 갈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군 사이의 의혹
2. [국민의힘] 대선 캠프와 명태군 사이의 의혹
3.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명태군 사이의 의혹 : 오세훈, 조은희, 김영선 그리고 이준석
4. [국민의힘] 부속 연구원인 여의도연구원과 명태군 사이의 의혹

동 기사문에 의하면 첫 번째 갈래 : 윤석열-김건희와 명태군에 관하여는 명태군 씨가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등을 받았다는 점을 정리하고 있고, 두 번째 갈래 : 윤석열 캠프와 명태군에 관하여는 명태군이 만든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로 흘러들어갔다는 점, 명태군이 캠프 인사에 관여한 정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비용 상당의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세 번째 갈래 : 오세훈, 조은희, 이준석의 경우 명태군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이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의 당선 결과를 도출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오세훈의 경우 동 기사문은 명태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18건의 비공표 여론 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중 13건에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KBS가 확인한 결과 중 6건에서 윤석열 후보의 경우와 비슷한 조작이 확인됐다면서 없는 샘플을 만들어내 결과를 원하는대로 조작하는 방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8) URL : <https://newstapa.org/article/lrOYP> 검색일 : 2024. 1. 5.

네 번째 갈래 : 여의도연구원과 명태균에 관하여 동 기사문은 1) 여의도연구원은 2021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전후로 명태균 씨에게 두 건의 여론조사 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로 3천만 원이 넘는 용역비를 지급했고, 2) 2022년 6.1 지방 선거를 앞두고는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이 서울시장과 구청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이 두 번째 의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국민의힘은 총체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선거의 공정성을 조직적으로 저해하는 정당임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본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은 피청구인의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폭력적 수단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서 당내 민주적 의사형성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통합진보당의 경우에 비교하여 보더라도 명태균 게이트에서 밝혀진 사실은 통합진보당의 경우에 못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2)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 및 국민의힘의 내란 옹호

앞서 본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로 선출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사건의 주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주체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였으며,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망을 좁혀 오고 2024. 9. 5.에는 언론사 ‘뉴스토마토’를 통하여 김건

회 여사의 공천개입의혹을 보도하여 사건이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증 제21호증 뉴스토마토, 2024. 9. 5.자 기사출력물¹⁹⁾).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의 준비시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경선 조작의혹사건의 전개와 매우 중요한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주범중 한명인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 9. 6. 임명됩니다. 이 시점은 언론사 ‘뉴스토마토’를 통하여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의혹을 처음 보도한 다음 날입니다(증 제21호증 뉴스토마토, 2024. 9. 5.자 기사출력물²⁰⁾).

내란실행을 담당할 핵심 부대로 북파공작원 20여명이 대기지시가 내려진 날은 2024. 10. 30.입니다. 그 날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사이의 통화녹취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날입니다. 녹음자는 김영선 전 의원의 운전기사였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024. 12. 9. 라디오방송에 출연하여 정보사령부(정보사)가 계엄을 대비해 최정예 북파공작원(HID) 20여 명을 선발해 대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증 제22호증 뉴시스, 2024. 12. 9.자 기사출력물²¹⁾). 이들은 주요 인물의 체포조 역할을 하려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현역 5~7명 규모에 나머지는 예비역 블랙요원이며, 일각에서는 이들이 북한군 역할을 꾸며 내서 사회혼란을 일으키려 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이 같은 사실을 직속 상관인 국방정보본부장에게 보고조차 않았습니다. 장관에게 받은 임무 관련 보안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2024. 11. 6. 명태균의 창원 국가산단 사업 개입 의혹사건을 배당하고

19) URL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39556> 검색일 : 2024. 1. 5.

20) URL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39556> 검색일 : 2024. 1. 5.

21) URL : https://www.news1.com/view/NISX20241209_0002988908 검색일 : 2024. 1. 5.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란세력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2024. 11. 17. 뒤에 '수사2단' 2팀장을 맡게 되는 김모 대령에게 A4용지 20장 분량의 '체포 리스트'를 전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30여 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증 제23호증 동아일보, 2024. 12. 24.자 기사출력물²²⁾).

한편 명태균 및 명태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은 2024. 12. 3. 18:30경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19:00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호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A4용지 한 장 분량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오후 10시에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과 함께 국회, 방송사 MBC,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꽃 등 10여 곳을 접수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증 제24호증 경향신문, 2024. 12. 11.자 기사출력물²³⁾).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최고권력자로서 공천권을 좌우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한 공천개입사실이 기소된 시점이 내란실행시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자신의 선거부정행위를 내란행위를 통해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다는 동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여부를 검토할 때, 명태균을 매개로 한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 내부의 정당민주주의의 훼손 정도를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2) URL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24/130710355/2> 검색일 : 2024. 1. 5.

23) URL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11714001> 검색일 : 2024. 1. 5.

(5) [국민의힘] 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어떤 정당이 앞서 본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정치적 과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이념을 부정하는 등 폭력적이거나 억압적 혹은 자의적인 지배를 통해 전체주의적인 통치를 추구할 경우에는 이러한 정당이 권력을 장악하여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토대를 허물어뜨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 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부를 중심으로 한 내란세력은 자신의 대통령 당선 근거와 [국민의힘]에 대한 위법한 공천개입에 대한 수사가 좁혀지자, 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그 중요한 동기 중 하나로 하면서, 더불어 마치 국민주권실현의 가장 중대한 절차인 선거제도를 사실상 무력화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들에 의하여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정보가 훼손되어, 이전 선거의 공정성을 점검할 기본 데이터가 망실되었다면 이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겪어야 할 혼란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힘]이 내란행위 및 내란행위에 대하여 옹호하는 태도, 그리고 내란행위의 동기에 깊이 결부된 명태균을 매개로 한 대통령부부와 [국민의힘]주요 선출직 의원들의 부정선거행위들은, 정당해산사유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6) [국민의힘]의 해산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민의힘]이 내란행위와 부정선거행위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드러난 이후 이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정치행위를 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정당해산이 자제되어야 할 논리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국민의힘]의 대표자 및 주요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책동에 대하여 진지한 사과나 반성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출당시키기는커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당론을 정하고 이에 반하는 자당 소속 의원들의 탄핵 찬성 의사표시를 배신자 취급하고 나아가 법원의 발부한 영장의 집행까지 방해하고, 그 방해를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지경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총 90석의 당선자를 냈습니다. 그 중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의 당선자 수가 59명입니다. 비례대표는 위성정당을 통하여 18석을 획득하였는데, 비례대표 의원 중 상당수는 자신을 공천해 준 [국민의힘] 주도 세력의 의사에 반대할 당내 정치력이 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2024. 12. 14.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85명으로, 위 5개 지역 당선자와 비례대표 중 상당수로 이루어진 ‘핵심세력’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연한 내란행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5개 지역의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 그 정치적 입장을 변경하지 않은 채 유사한 구성을 재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의 주도세력은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반대세력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대한 정치적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내란행

위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2024. 12. 5.부터 공공연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우리 헌법의 근본적 가치중 하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힘]이 보이는 이러한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결단을 통해 내란행위와 명태균게이트에서 보여준 [국민의힘] 정당운영의 비민주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러합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결정이 있게 되면, 위 5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심의 혼란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겠으나, 내란을 옹호하고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하는 정당에 대한 제도적 금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당의 정당활동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대한민국의 정부, 사법기관, 의회, 그리고 개개의 국민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2024. 12. 3.에 드러난 내란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하게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현 정부가 여당인 [국민의힘]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모두 공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행동에 스스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위에 적은 사유로 [국민의힘]에 대하여 정당해산청구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

되오니, 진정취지대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2014년 구성한 ‘위헌정당해산 TF’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심판청구 준비작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자료

- 1. 증 제1호증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서
- 1. 증 제2호증 국민의힘 홈페이지 ‘걸어온길’ 출력물
- 1. 증 제3호증 중앙일보 2024. 12. 30.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4호증 보도참고자료 김용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
- 1. 증 제5호증 보도 참고자료 박안수, 곽종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
- 1. 증 제6호증 한겨레, 2024. 12. 25.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7호증 한겨레, 2024. 12. 29.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8호증 머니투데이, 2024. 12. 6.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9호증 한겨레, 2024. 12. 5.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10호증 매일경제, 2024. 12. 12.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11호증 한겨레, 2024. 12. 19.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12호증 서울신문, 2024. 12. 17.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13호증 연합뉴스, 2024. 12. 26.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14호증 MBC, 2024. 12. 27.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15호증 시사저널, 2025. 1. 3.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16호증 조선일보, 2025. 1. 3.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17호증 MBC, 2025. 1. 3.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18호증 한국경제, 2025. 1. 2.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19호증 경향신문, 2024. 12. 11.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20호증 뉴스타파 2024. 11. 18.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21호증 뉴스토마토, 2024. 9. 5.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22호증 뉴시스, 2024. 12. 9.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23호증 동아일보, 2024. 12. 24.자 기사출력물
- 1. 증 제24호증 경향신문, 2024. 12. 11.자 기사출력물

2025. 1. 5.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 선 민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귀중